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대전광역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3. 안 건 요 지 : 별 첨
4. 검 토 의 건 : 별 첨

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1996년 3월 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홍 전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996 . 3 .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1996년3월1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996년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 안 이 유

- 각종 생활제품의 생산과 공급수단이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상의 손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등을 규정하므로써
- 소비자 보호중심의 자치행정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가.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소비자의 역할 명시 (안 제1조 ~ 제5조)
- 나.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따른 조치규정 (안 제6조 ~ 제11조)
- 다.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규정 (안 제12조 ~ 제16조)
- 라. 사업자의 의무사항 규정 (안 제17조 ~ 제23조)
- 마. 소비자의 피해구제 규정 (안 제24조 ~ 제27조)
-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권고 및 공표규정 (안 제30조 ~ 제31조)
- 사. 소비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 운영규정 (안 제32조 ~ 제37조)
- 아. 과태료부과 규정 (안 제38조 ~ 제43조)

3. 관 련 법 규

- 소비자보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 제15조 (조례)
- " 제16조 (규칙)
- "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4. 검토 의견

-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소비자보호조례는 고도의 산업경제 발전으로 소비자와 관련된 각종 생활제품의 생산기술과 판매수단이 복잡화, 다양화저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상의 손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적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 제1조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법의 목적에 준하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은 물론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무와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시장은 소비자의 건강상 위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하였음.
 - 제12조 내지 제16조에는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소비자 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며, 조직의 운영과 육성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인 보호를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단체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 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결함상품 제공방지 상품의 표시사항 준수, 거래 조건의 명시, 계량 및 포장등의 적정화, 허위광고 및 선전의 제한등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음.
- 제24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구제의 절차와 방법, 요건과 함께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제30조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 부당거래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태조사 활동등을 규정하였음.
- 제34조 내지 제37조에서는 소비자 피해와 불만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의 알선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처리위원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소비자 보호행정 및 피해구제 처리에 따른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한 것이 되겠음.

○ 개정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때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인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게 된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됨.

그러나 소비자 분쟁처리위원회의 기능이 알선, 조정, 의견개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점진적으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 대상을 물품의 제조, 판매, 유통위주로만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 제정시 명문화와 함께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됨.